

■ 우유가공조합 할로 모색 절실

우유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가공우유조합의 분유재고만 최근 1년간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가공협회에 따르면 5월 10일 현재 분유재고는 1만1,64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195톤과 비슷하다. 그러나 전체 분유재고 중 일반 유업체 물량을 제외한 우유가공조합의 분유재고는 3,866톤으로 집계돼 지난해 2,982톤보다 800톤 이상 늘어났다. 지난 달에는 4,500톤을 넘어서 전체 분유재고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가공조합의 국내 원유생산 비중이 37%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조합의 분유재고는 조합경영에 큰 부담이다. 일부 조합의 경우 자본금 잠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분유지급 조치가 취해져 조합원의 불만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는 시유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마케팅에서 가공조합이 유업체에 밀렸으며, 농가의 잉여원유 부담비중도 일반 유업체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시유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유 덤핑판매가 성행했고 조합에 비해 탄력적인 우유수급이 가능한 유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조합은 조합원 농가 수익 보전을 위해 잉여원유 가격을 업체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잉여유 부담을 최대한 감당하려는 성향이 있다”며 “이대로라면 우유가공조합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한·미FTA 반대 美 원정시위 “GO”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저지 원정투쟁단’이 정부측 반대와 관계

없이 내달 초 원정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6월 3일부터 9일까지 한 주간 일정으로 미 워싱턴D.C 백악관 앞을 거점으로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가 지난 5월 19일자로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공동명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이들 단체의 원정시위계획은 일부 언론의 못매를 맞았다. 이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5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정시위 비난에 앞서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라”면서 “평화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원정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한국정부가 미국 측에 농민단체 인사들의 명단을 넘겨 비자발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 구제역 빗장 방역체계 구축

국내 구제역 전문가로 구성된 구제역분과위원회가 구제역 관련 실적 평가 등을 통해 구제역의 빗장 방역체계를 점검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5월 25일 검역원 소회의실에서 역학조사 구제역 분과위원회를 개최,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추진한 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대책기간 종료 후 평시체제 전환에 따른 구제역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박종현 구제역연구실장은 중국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구제역 발생 현황과 전파 경로, 바이러스 타입 등에 대해 그 동안 분석한 자료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중국으로부터 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제역 청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

기 위해서는 평시에도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준하는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구제역 발생국을 여행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색과 소독, 농장출입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주변 구제역 발생국가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계속 확산 시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축산물 일단 '민감품목' 분류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을 농림부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축산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농림부는 오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1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측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면서 현재 대미 수입실적이 많고 향후 수입가능성이 높은 육우,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닭고기, 낙농품(분유, 치즈 등) 등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 축산업계 원을 하락에 '히비'

환율하락과 국제유가상승 등이 국내 축산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율하락은 그렇지 않아도 늘어나고 있는 축산물 수입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 축산물 생산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는 원료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하락이 배합사료 가격 인하 요인이 됨으로써 축산 경영비 부담을

다소 덜어주고 있다. 환율하락에 축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이 최근 발표한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국제유가 상승이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사료는 0.5%, 비료 0.15%, 영농광열비는 무려 7.5%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일러용 등유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에는 축산 부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도축세 폐지' 입법발의 추진

김영덕의원(한나라당)이 도축세 폐지를 위한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세 중 시·군에 해당하는 도축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중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도축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주요 축산물 수출국가들에게는 없는 도축세가 우리나라에서만 부과되고 있다"며 "이러한 도축세는 도살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축산농가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연간 4백억에서 5백억원의 생산비 부담을 축산농가들에게 지우고 있는데다 도축세는 일반세로서 그 세수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특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도축세를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는 전체 지방세수 중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0.2%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그 세수감소에 따른 시·군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식품안전처 신설 반대' 추진위 구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내에 가칭 '식품안전처 신설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축산식품체계 개편과 관련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식품안전처 신설 반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지난 19일 4명의 준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위원은 학계와 주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언론계,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한 내달 중에 식품 안전처 신설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농가부채경감' 내달까지 신청접수

농가부채경감을 받으려면 오는 6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경감대책의 신청기한이 오는 6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농업인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채경감대책은 지난 2001년도 지원된 상회금융자리 대체자금(5조9천억원)을 2006년 중 상환해야 하나 DDA협상, FTA 확산 등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년 내지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리 3%, 5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리 5%, 3년 분할상환토록 했다.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5월 15일 현재 채무자 상환액, 지원제외대상액, 신청포기액 등을 제외한 2006년 순지원대상자금 4조6천4백22억원 대비 약 51%인 2조3천6백71억원의 신청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농림부, 국경검역 '경계령'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베트남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내 축산인들의 베트남 방문을 삼가는 한편 국경검역의 강화가 한층 요구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축산업계나 여행하는 축산인들에게 발생지역 방문을 삼가고 귀국시 철저한 소독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베트남에서는 2004년도에 발생한 고병원성 시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부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국내 양돈, 사료, 동물약품 등 축산업계는 최근들어 베트남 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해 현지 출장이 잦아지고 장기 체류 근무자의 교체 등 입국시 구제역 병원체 유입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양돈, 사료, 동물약품 단체에 검역 협조를 당부하고 검역원으로 하여금 베트남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색, 신발 소독 등 입국 검역과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한편 베트남은 소 7백만두, 돼지 2천5백만두, 가금 2억5천4백만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구제역, 돼지콜레라에 대해 예방접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

농림부는 올해부터 농업유전자원에 대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하고 생명산업시대의 중요한 국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종자은행을 '농업유전자원연구소(가칭)'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업유전자원 보존을 보면 동물자원의 경우 소, 돼지 등 7축종에다 19품종, 1만3백33마리가 축산연구소에 보존되어 있다.

농림부는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농촌진흥청 및 산림

청과 추진팀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농지 불법전용 훼손' 줄어든다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농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농림부가 지난 5월 19일 발표한 지난해 지자체를 통해 실시한 '2005년도 농지 불법전용 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관할 허가청의 농지전용허가(신고)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농지를 훼손하여 적발된 건수와 면적은 각각 2천7백95건, 4백2ha(약1백22만평)로 전년대비 건수로는 15%, 면적으로는 19% 각각 감소했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시·도간 특별교차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불법 개발이익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법당국에 농지불법전용 사범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소부루세라병 살처분 보상금 연내 80% 감액 계획

농림부가 소부루세라병 방역강화 일환으로 검사를 대폭강화하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지원도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연내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3월까지 소부루세라병 발생건수는 586건에 4,501마리로 지난해와 비교해 발생건수는 줄었으나 마리수는 늘었다. 감염률은 1.89%로 지난해 평균 2.03%에 비해 줄었으나 발생지역의 반복 발생률이 높아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어 정부가 보완대책 마련

에 나선 것. 특히 대구, 울산, 충북, 경북, 경남은 평균 양성률을 웃돌고 있어 이들 지역의 소부루세라 방역강화를 위한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원 자료에 따르면 3월까지 가장 검진비율이 낮은 지역도 대구로 0.09%에 그치고 있다. 이어 경남도 9.63% 충북 11.9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2013년 소부루세라병 근절을 목표로 단계별 감염률 감소 목표치를 설정, 감염소 색출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감염률 감소 목표치는 1.5% 미만이다. 농가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살처분 보상금 감액지원도 올해 조기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살처분 보상제도에 따르면 농가의 방역 규정 이행여부를 심사해 가축평가액의 40%에서 최대 100%까지 보상해 줬던 살처분 보상금의 최대치를 80%까지 감액 조정한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한 각 시군에서의 보상금 산정시 정확성을 위해 저울을 구비해 해당소를 계속하는 것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부루세라병 전파·확산 방지를 위해 송아지와 번식우, 중소에 대한 검사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송아지 거래시 어미소의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첨부을 의무화하고 번식우와 중소에 대한 검사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소부루세라병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속 검사하고 발생후에도 1년간은 집중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3회이상 추가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검역원에 전담팀을 만들어 집중 검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이동제한 기간 연장 등도 검토하고 있다.

(자료발췌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농민신문 등)